광주 남구의회 소통창구 부족…알 권리 '외면' 지적

5개 기초의회 중 '유튜브' 無 유일…북구는 2022년 개설
SNS도 6-7월 오픈 활동 미미…주민들 "실시간 공개해야"

광주 기초의회가 구민의 '알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으나 남구의회는 대민 소통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남구 주민들은 "타 기초의회 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하고 있다.

23일 광주 5개 기초의회에 따르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민 홍보 및 양방향 소통' 강화 차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송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지역 기초의회 중 가장 먼저 라이브 송출을 시작한 북구의회는 같은 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33건의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라이브 송출 건수는 162건, 올해 현재까지는 73건이다.

북구의회에 이어 라이브 송출을 시작한 곳은 동구의회로 지난해 82건, 올해 현재까지 97건의 활동을 생중계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라이브 송출에 돌입, 그 해 8건, 올해 현재까지 38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서구의회의 경우 라이브 송출은 하지 않고 있으나, 회기 활동을 녹화 영상으로 업로드 중이다.

반면, 남구의회는 유튜브 채널조차 없이 '대민 홍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만 하고있다.

그나마도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인스타그램은 7월에 오픈해 현재까지 의사일정, 의정활동 등 관련 게시물 8건만 업로드 돼 있다.

때문에 지역 내 타 기초의회에 비하면 활동이 '많이 저조한' 편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SNS 운영에 나서 현재까지 601건의 게시물을 업로드 했고, 같은 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에 나선 광산구의회의 게시물은 이날까지 총 632건이다.

지난해 SNS 계정을 개설한 동구의회와 서구의회의 게시물은 각각 704건, 313건으로 파악됐다.

남구의회의 이같은 '부족한' 홍보 활동에 지역 주민들은 "너무 무심한 것 아니냐", "구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성 의견을 보이고 있다.

남구 주민 김모(50대)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초의회에도 관심이 많아 유튜브 등을 통해 소식을 찾아보는데, 지역에서 남구의회만 채널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1인 방송'의 시대가 된 지 오랜데, 주민과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에서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 남구의원도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조차 개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관계자는 "올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녹화 영상 및 홍보 영상 업로드를 검토하고 있다"며 "실시간 라이브 송출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으나 대민 홍보 방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남구의회, 노조 요구 수용… "업무보고 '서면'으로"

광주 남구의회가 집행부 노조 요구를 수용하며 상반기 업무보고 방식을 대면에서 서면으로 변경했다.

23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오는 25일 진행되는 제305회 임시회 상반기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파행이 거듭돼 의회 일정이 2주간 미뤄짐에 따라 직원들의 여름 휴가와 겹치게 되면서 업무보고를 대면에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남구의회가 거절해 전날 '의회 갑질 규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서면 업무보고를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31일 열리는 2024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보고는 직원들의 참석 없이 자료 제출로 대체된다. 다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는 대면 방식을 유지한다. /주성학 기자

장애인 평생교육 외면마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시청 행정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 책임 외면말라고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폐업 숙박업소 업주 둔기 살해 60대 긴급체포

이달 중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얼굴 기억한 형사 신원 특정

광주의 한 폐업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전자기기까지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한 폐업 숙박업소 1층에서 업주 B(60대)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버스에 탑승 했는데, 좌석에 놓여 있던 타인의 휴대전화 1대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날 경찰은 "B씨가 며칠째 연락이 안 닿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모텔에서 행적을 확인하던 중 일부 시신이 훼손된 채 부패가 진행 중이던 B씨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 등을 발견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은 이달 중순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나 조사를 받았던 그의 얼굴을 기억한 형사가 신원을 특정, 추적을 통해 이날 오후 3시께 서구 쌍촌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살인·폭행·절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화기 등 둔기로 B씨를 때려 사망하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성학 기자

'사망사고' 금호타이어 작업중지 명령

광주노동청, 지게차 12대 대상…중처법 적용도 검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하 광주노동청)이 최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3일 광주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금호타이어 정련 공장 현장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 12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게차 12대는 고무시트지 운반에 사용되는 것들인데, 지난 2일 노동자 A(40대)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고무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이틀째 중단된 공정의 업무 재개 시점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게 광주노동청의 설명이다.

다만 공장 측의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광주경찰청도 지게차 운전자·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정 기자

선원 살해·유기…檢, 3명 추가 구속 기소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살해 후 바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선원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23일 살인방조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선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선장 B(45)씨와 조리장 C(48)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선장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단순 폭행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의 사망 당일 CC(폐쇄회로)TV 영상 9천700개의 분석을 통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선장 B씨가 삭제했으나 검찰에서 복원한 CCTV 영상에는 A씨 등이 숨진 동료 선원을 구타하고, 사망 당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청소용 호스로 차가운 바닷물을 쏘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안재영 기자

살해 후 시신 유기 50대 '징역 16년'

고향 선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고흥군 봉래면에서 고향 선배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죽게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순천=정기 기자